

OECD 경제정책위원회 구조개혁작업반(WP1) 회의 결과 보고

◇ '18.10.25~26일 양일간 OECD(파리)에서 개최된 구조개혁 작업반(WP1)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

* Working Party No. 1 on Macroeconomic and Structural Policy Analysis

** 참석자 : 물가분석팀장 조석방, 박정상 사무관, KDI 임상민 박사 등 3명

1 Going for Growth 2019 (2019년 구조개혁 보고서)

< 주요내용 >

I 개관(Overview)

- '17~'18년의 구조개혁 속도는 금융위기 직후의 높은 수준보다 낮으며,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안정화
 -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선진국은 투자 지원 및 조세 개혁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, 신흥국은 인프라와 교육 개혁에 중점
 - 노동 활용도 측면에서 선진국은 여성의 참여, 실업수당·퇴직제도 재설계, 신흥국은 규제완화, 감세 등을 통한 비공식적 노동 축소에 초점
 - 한편, 과거에 개혁이 강했던 국가들은 최근 개혁의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개혁 피로감, 정부신뢰 감소, 정권 후반기 등의 영향
- '19년 구조개혁 과제는 노동생산성, 디지털 기술, 노동활용 및 포용성,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측면으로 구분
 - (노동 생산성) 중요소생산성 둔화세 지속,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최근 생산성 격차가 확대
 - (디지털 기술) 생산 효율성, 비용절감, 글로벌 접근성 등은 장점, 규모의 경제(높은 고정비용+낮은 한계비용)로 독점기업 문제도 가능

- (노동 활용 및 포용성) 대부분 국가의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, 고용 격차의 원인은 국가별로 상이
- (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) 높은 소득불평등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및 사회적 이동성 감소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
- 생산성과 고용 증진 등을 통해 포괄적,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국가별 개혁 우선과제는 다음과 같음
 - ① (기업의 경쟁 확대) 후발기업, 무역·FDI에 대한 장벽 완화, 산학 R&D 등 기술개발을 통해 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 필요
 - ② (평등한 기회) 기회의 평등 및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이동성 제고
 - (교육기회 제공) 기술 습득 등을 통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
 - (노동시장의 기회 평등) 양질의 일자리 및 포용성·사회이동성 제고
 - (인프라와 주택정책 개선) 인프라 개선은 교육,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소득·지역간 불평등 완화 및 기업간 기회의 평등을 개선
 - (환경적 지속가능성) 기후 변화는 미래의 성장·복지에 큰 위협이므로, 환경에 의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
- 포용적이고,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권고사항으로는
 - ①기업 역동성 제고, ②기술개발, ③근로자 지원 등이 포함
 - ① 허가 간소화, 무역규제 완화 등 경쟁을 통해 기업의 혁신 촉진과 함께 인프라 확대, 조세 제도 개편(재산·소비·환경세로의 전환) 필요
 - ② 초·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, 직업훈련 확대, 평생학습 활성화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고용과 성장 촉진
 - ③ 양질의 보육을 통한 여성 노동참여 제고, 근로 의욕을 감소시키는 과도한 노동 과세 개혁, 정규·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해소 필요

② 녹색 성장과의 통합

(The integration of green growth in Going for Growth)

- 지속가능하고,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행되기 위해 개혁의 우선순위는 환경적 고려가 필요 → '19년 구조개혁 보고서부터 환경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통합하여 다루는 것이 공식화
- 환경과 성장과의 관계는 복잡하여 측정되기 어려운 측면
 - 자원고갈, 환경 파괴 등은 성장과 삶의 질에 악영향
 - 기후변화는 '60년까지 전세계 GDP의 1.0~3.3%, 대기오염은 1.5% 규모의 직접비용 발생 추정(OECD 추정모델) → 불확실·보수적 전망
 - 환경과 성장의 관계는 지속가능성, 미래의 결과에 대한 위협, 삶의 질, 국가간 외부효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
 - 국가간 부정적 외부효과 및 계층별 불균형한 영향(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더 큰 영향)에 따른 분배효과 등도 고려 필요
- 환경의 지속가능성 위해서는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정책과 성과간의 관계(환경과 성장 간의 교차효과)에 대한 실증 분석을 고려할 필요
 - ① 친성장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
 - 성장은 천연자원 사용, 통근 증가 등 더 많은 환경피해 초래 → 급속 성장은 단기 성장과 장기 지속가능성간의 교환의 성격
 - ② 환경 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
 -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 등으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, 다만 기업이나 산업 등 다른 요소에 비해 영향이 작음
- '19년부터 구조개혁 보고서 분석은 고용, 생산성, 포용성 외에도 환경의 측면을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한 정보를 기반

- 통합을 위해 고려되는 녹색 성장의 영역으로는 기후변화(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)와 대기오염(미세먼지 배출량 등) 등이 활용되며, 정책측면으로는 OECD, WEF 등의 지표가 활용
- 중국, 일본 등 11개 국가는 명시적으로 녹색 성장의 우선순위를 포함,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우선순위에 명시적으로 녹색 성장을 포함하지는 않으나,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녹색성장 권고사항을 포함
 - 이들 국가는 조세 구조, 세원, 농업구조, 인프라, 법 집행 등의 영역에서 녹색 성장과 관련된 정책 권고를 포함
 - 소득세에서 소비세(환경세 포함), 재산세로 세부담을 전환하여 성장과 환경에 기여, 환경관련 기술 혁신도 영향
 - 화석 연료 보조금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축소하고, 친환경 행위(대중교통 수단으로 통근 등)에 대한 조세지출을 확대

③ 국가별 보고서 (Country notes)

< 총평 >

- (성장) 한국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 → OECD 상위 국가들과의 1인당 GDP 격차가 30% 이내로 축소
- (분배) 지니계수는 OECD 평균보다 낮으나, 상위 10%의 소득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,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 이상
- (성과) '17년의 Going for Growth의 우선과제 중 혁신 촉진을 위한 '사전허용, 사후규제(first permission, ex-post regulation)를 발표
- (권고) 서비스 분야 등에서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규제 개혁 필요
 -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과 노령층의 노동참여 확대를 위한 개혁 →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 필요(노동시장 양극화 해소)

< 2019년 Going for Growth 우선순위 >

①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규제 진행상황 점검

- 과도한 상품시장 규제는 경쟁·생산성 제고를 저해(특히, 서비스분야)
- (성과) '사전허용-사후 규제'(first permission, ex-post regulation) 방식* 발표('17.9), 혁신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은 2년간 규제 면제('18년)
- (권고) 포괄적인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시스템 도입

② 여성 및 노령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강화

- 여성 고용률은 남성의 20%p 이하(OECD 4번째로 큰 격차), 조기 퇴직
- (성과) 출산휴가 미허용 의심기업 조사('17), 주간 근무시간 52시간으로 축소(연간 1,800시간 목표), 고령자 대상 훈련프로그램 지원 확대
- (권고) 사립 보육시설 수업료 한도 및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강화하고, 인증제를 의무화하여 보육의 품질 제고

③ 고용보호법(EPL) 개혁 및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

- 노동시장 양극화는 불평등 심화 및 생산성 저해, 여성고용에도 부정적
- (성과) '20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(20.5만명), 정규직 전환 기업 대상 보조금 인상(월 60→80만원, '18)
- (권고)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 완화,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당해고 구제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, 사회보험 확대,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 확대 →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

④ 세계 효율성 제고 및 사회 안전망 강화

-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확대 및 성장친화적 조세제도 개편 필요

- (성과) 사회지출 확대(연평균 9%, '17~'21), 아동수당 및 청년 실업 보조금 도입('18), 기초연금 인상(25만원, '18.9), 법인세율 인상(22→25%, '17)
- (권고) 부가세, 환경 관련 과세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총세입 확대, 고령층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최저소득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 강화,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범위 확대

⑤ 농업 분야에서 생산자 지원 축소

- OECD 평균의 3배인 생산자 지원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 전가 + 시장가격을 통한 지원은 농업 구조를 왜곡
- (성과) 쌀값 하락으로 '17년 변동보조금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, 쌀 수급을 위해 논면적 감축, 생산 다각화 장려, 수요 촉진 추진
- (권고) 농산물 수입장벽의 점진적으로 축소, 생산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한 지원 축소, 지원 방식을 시장가격 지원에서 직접지원으로 전환, 지목변경 규정을 개정하여 농장 통합 촉진

< 평가 및 토론 >

-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높았던 구조개혁의 속도가 최근 안정화 되어가고 있음에 대체로 동의
- 개혁 속도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, 개혁추진에 따른 피로 등 개혁 비용, 개혁의 정치·경제적 측면 등의 논의(독일, 이탈리아 등)
- 회원국은 여성 및 노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 등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
- 이를 위해 어린이집 시설 확대 등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, 더욱 확대될 필요(일본 등)

- 또한,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크더라도,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(프랑스, 터키 등)
- 회원국들은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의 측면에서 구조개혁의 우선순위에 환경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
- 다만, 환경과 경제성장 및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(캐나다, TUAC 등)
- 또한, 환경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의 비용-효율성 측면에서 국가별 정책 제언이 필요(스위스, 스웨덴 등)
- 녹색 성장과 관련한 구조개혁이 세원의 규모 등 조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(이탈리아, BIAC 등)
- 대한민국 대표단은 OECD 회원국들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저출산·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간 갈등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

2 Preliminary Results for the 2018 Product Market Regulation Indicators(PMR) [18년 상품시장규제 지표(PMR)의 예비 결과]

< 주요내용 >

- (개요) 경쟁적 규제는 기업의 혁신과, 생산성 제고, 소득불평등 감소를 통해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→ 국가의 규제 입장을 측정하고, 시간경과에 따른 개혁을 추적하기 위해 상품시장규제(PMR) 지표 개발
 - * 2018 PMR 지표의 예비 업데이트 내용을 제시 → 최종 지표는 '19년 초 발표
- 예비 결과에 따르면, 대부분 국가들이 OECD 평균에 가까운 규제 스탠스를 지니고 있으며, 방법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유사하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임
- 부문별로는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국가간에 높은 수준의 수렴을 보이나, 소매 유통과 전문서비스*에서는 차이가 여전히 존재
 - * 회계사, 건축가, 토목 기사, 변호사, 공증인, 부동산 대리인 등 6개 직종
- (이전과의 차이점) 방법론, 질문 내용 등이 추가·변경되었으며, 구성 또한 국가의 관여에 의해 야기된 왜곡, 국내외의 진입장벽의 두 가지 부분으로 변경
 - (국가의 관여에 의한 왜곡) 국영과 민간기업에 부과되는 다른 형태의 규제와 의무를 통해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여 발생하는 왜곡을 포착
 - (국내외의 진입장벽) 기업 설립에 필요한 절차의 복잡성, 네트워크·서비스업 진입·확장에 대한 규제 수준, 무역·투자의 장벽 수준 포함
- (예비결과) 많은 국가들의 PMR 지표값은 '13년에 이어 OECD 평균으로 수렴
 - 한국은 평균을 소폭 상회하며, '13년, '18년 모두 OECD 평균을 상회

- '국가 개입에 의한 왜곡'이 '국내외 진입장벽'보다 PMR이 더 높게 측정
 - 국가 개입에 의한 왜곡은 주로 공적 소유권의 요소에서 값이 높게 측정되었으며, 국내외 진입장벽은 서비스와 네트워크에서 높게 측정
 - 한국은 '국가개입에 의한 왜곡'은 OECD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반면, 상대적으로 '국내외 진입장벽'은 평균을 상대적으로 큰 폭 상회
- (평가) 분야별 PMR 지표의 결과는 국가별로 각각의 분야를 규제하는 방식과 경쟁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정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
 - 네트워크 분야에서 ①통신은 대부분 국제적인 모범에 부합하는 규제를 채택하여 결과값이 낮고, ②교통은 편차는 작으나, 전체적인 규제 수준은 통신보다 높으며, ③에너지는 편차가 상대적으로 큼
 - 서비스 분야에서 소매유통은 규제가 크지 않지만, 국가간 편차가 크며, 전문서비스는 국가별로 규제가 강하여 규제 수준 및 편차가 모두 큼
 - 한편, 부문별 PMR의 장기 시계열로 비교시, 규제 정도는 80년대 중반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 후 하락한 뒤, 2000년대 중반 이후 안정세를 보이며, 이는 규제의 품질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

< 평가 및 토론 >

- 회원국들은 대체로 PMR 지표가 국가의 영역별 규제 현황 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정책 수립에 유용하다는 데 동의
 - 특히, 세부 영역별 결과는 분야별 맞춤형 정책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하여 개혁에 대한 정치적 인센티브를 제공 (캐나다, 일본 등)
 - 개혁의 성과 평가의 측면에서 유용성이 큼(프랑스 등)
 - 또한, 경쟁 영향평가,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등 이번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영역들 또한 설명력 제고에 기여(뉴질랜드 등)

- 다만,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고, 답변의 양식에 제약이 있어 명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회원국들의 의견도 제시됨(스페인, 이탈리아, 일본 등)
 - 아직 답변의 비율이 높지 않아 결과 해석에 제약(아르헨티나 등)
 - 또한, EU 국가간의 결과값의 차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(스위스)
 - 이와 관련하여, OECD는 개별 국가와의 직접 협의를 통한 피드백 및 결과값에 대한 검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변
- 또한, 과거 지표와의 안정적인 시계열 비교 등 지표의 설명력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(뉴질랜드 등)
 -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도 이러한 설명력의 제고가 중요(프랑스)

Can productivity still grow in service-based economies? (서비스 기반 경제에서의 생산성 지속 증가 여부)

< 주요내용 >

- (현황) 서비스업 노동자 비중 증가세(70% 이상 차지, 95년 대비 10%p↑)
→ 성장과 포용성(고용)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
 - 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40% 낮고(OECD 평균), 생산성 증가율(1.3%) 또한 제조업(3.0%) 대비 낮은 상황
- (원인) 낮은 표준화(무형), 대면적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내재적 특성
 - ① (추가 거래비용) 낮은 표준화(법률, 컨설팅 등)에 따른 정보비대칭, 전환비용에 따른 장기계약(은행, 통신사 등), 공간 비용(미용실 등) 등
→ 경쟁 압력 및 효율적 재분배가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경향
 - ② (규모의 경제, 자동화) 직접제공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에 제약, 프랜차이즈 등을 통한 핵심 활동도 개별적으로 진행(식당, 도소매 등)
 - ③ (국가간 거래 애로) 지식의 전파·확산, 전문화, 경쟁압력 증가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한계
- (서비스 비중 확대) 고용에서 서비스 비중은 모든 OECD에서 크게 증가, 생산에서의 비중은 제조업 생산성 향상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음
 - 서비스 고용 비중이 확대되는 주요 원인은 서비스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증가와 소득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와 연관
 - 추가적으로, 투자의 불명확성 확대, 제조기업의 아웃소싱에 대한 의존 확대, (기존에 가정에서 행하던)신규 서비스, 고품화 등도 영향
- (영향) 서비스 중심 경제에서 총생산성 증가는 서비스 성과에 좌우
 - 서비스 비중 확대로 연간 생산성 성장률 0.3%p 하락('95~'15, OECD 평균) → 서비스업이 전체 생산성에 제약, 향후 확대 가능성

- 현재 수준의 제조업·서비스업 생산성 증가가 지속시, '15~'25년 평균 총생산성 증가율은 '05~'15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
 - 제조업 생산성만 과거 수준으로 반등시 총생산성 증가는 크지 않음
→ 서비스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어야 큰 폭의 총생산성 향상 가능
- (전망) 높은 생산성의 지식기반 서비스의 중요성 증가, 신기술의 잠재성, 정책 개선여력 등으로 향후 서비스업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 존재
 - 지식기반 서비스(ICT 등)는 규모의 경제, 자본 확대, 국가간 무역, 전문화, 지식의 전파 등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킴
 - 또한, 지식기반 서비스 생산성 향상은 저생산성의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 가능(ICT, 금융서비스 등)
 - 한편, 신기술은 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짐
 - ①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 비대칭성과 진입장벽을 완화
 - (정보 비대칭)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(숙박 예약 등)하여 공급자 평가를 전문화 → 정보비대칭 완화 및 경쟁 인센티브 제고
 - (진입장벽)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서비스 제공 활성화 및 공급 확대(Airbnb, Uber) → 경쟁 압력 증가
 - ② 인공지능은 반복적인 서비스 업무의 자동화를 지원
 - 기존에는 제조업의 반복작업의 자동화에 초점 → 인공지능은 서비스 산업에도 큰 잠재력 보유(자율주행차를 통한 운송업 등)
 - 그러나, 서비스업 자동화는 저숙련 근로자 일자리 대체, 불확실성, 보안 문제, 기업의 시장지배력 증가* 등의 문제를 유발
 - ③ 통신 기술은 서비스 무역을 촉진
 - 정보통신기술은 공간적 거래비용을 줄여 국가간 서비스 무역을 지원(영상회의 등)하고, 음성인식·번역 등을 통해 무역장애를 해소

- (정책) 새로운 기술의 생산성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,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정이 중요
 - 신기술의 채택과 확산, 혁신의 촉진, 노동과 자본의 재분배
 - 디지털 플랫폼의 관점에서 전통적 규제 재검토를 통한 정보비대칭 및 진입·노동이동성 장벽 해소, 플랫폼의 경제적 편익 극대화
 - 경쟁·특화, 기술 확산을 위해 국가간 교류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

< 평가 및 토론 >

- 서비스업의 노동자 비중은 증가세인데 비해 노동 생산성은 낮은 수준으로, 향후 경제성장과 포용성 측면에서 서비스업 생산성의 논의가 더욱 중요
 - 특히, 최근 서비스업에서의 자동화 도입 등으로 저숙련 노동자가 대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고용 및 포용성의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(오스트리아 등)
 - 디지털 플랫폼, AI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및 생산성이 이전과 크게 변화(네덜란드 등)
-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시장의 경쟁 촉진이 중요
 -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자원의 분배와 시장의 진입·퇴출을 활성화하여 서비스업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제공(EC)
 - 다만, 디지털 플랫폼은 반대로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(ECB, TUAC 등)
 - 디지털 플랫폼은 승자독식의 가능성이 높아, 기존 사업자가 신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될 우려도 존재(미국, 벨기에 등)

- 전체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
 - 이를 위해 서비스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서비스업 종사자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정책 등이 수반될 필요(스웨덴, 오스트리아 등)
 - 특히, 서비스업에서의 낮은 생산성은 다른 영역에서의 생산성을 낮추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응이 중요(벨기에)

**4 Labour Productivity Growth and Finance:
The Role of Intangible Assets**
[금융이 노동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효과: 무형자산의 역할]

< 주요내용 >

- 무형자산이 OECD 국가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**금융의 발전이 무형자산을 통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지 분석**
 - 무형자산은 **담보로서의 가치가 부족하고 높은 정보비대칭 문제**에 직면하고 있어 **금융발전이 그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**
-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, **금융발전을 통한 생산성 증대효과가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남**
 - 상위 33% 수준의 무형자산 비중을 보이는 산업의 경우, **금융이 발달한 국가가 1.2%p 가량 높은 생산성 증가를 경험**
-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**금융정책관련 변수가 금융-무형자산간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**
 - **(금융의 구성)** 신용에 비해 **주식시장 비중이 높은 경우**에 금융의 무형자산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높음
 - **(금융산업 경쟁)** 은행부문의 **경쟁정도가 높을수록** 금융의 긍정적 효과가 높게 나타남
 - **(금융자유화)** 자유화 정도가 높고 **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인 증권시장**에서 긍정적 효과가 컸음
 - **(규제환경)** 사업실패에 대한 **패널티가 적을수록, 계약이행에 대한 강제력**이 높을수록 금융의 긍정적 효과가 높음
 - **(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)**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한 **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** 생산성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남

< 평가 및 토론 >

- **금융이 무형자산의 형성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데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**
 - **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연구** (스페인)이며 **경제의 서비스화와 생산성 둔화 문제**와도 관련이 있음 (영국)
- **다만 분석의 해석에 있어 유의할 사항이 있음**
 - 분석에 사용된 계량모형은 무형자산 비중이 서로 다른 산업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어떻게 상이한지만 분석하고 있어 **금융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자체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**(스페인)
 -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**실제 생산성인지 기업의 독점력 확대인지** 구분하기 어려움(스페인)
 - 무형자산의 담보로서의 가치 및 높은 정보비대칭성 문제 등은 그 종류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**무형자산 형태별로 효과가 상이할 가능성**(한국)
- 금융과 무형자산간 관계에 대한 보다 **정확한 분석과 이해**를 위해 필요한 **추가적인 분석**에 대해 논의
 -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지나친 **금융의 발달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**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만큼 관계의 **비선형성도** 고려할 필요 (한국, 터키)
 - **생산성이 역으로 금융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**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업단위의 미시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음(스페인)
- OECD 사무국은 회원국 논의에 **대체로 동의하면서 자료의 제약** 등 어려움이 있으나 **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** 등을 추가로 고려하겠다고 답변

Fan Charts around GDP Projections Based on Early Warning Indicators and Probit Models of Downturn Risk (조기경보지표와 프로빗 모형에 기초한 GDP 전망 팬차트)

< 주요내용 >

- 프로빗 모형이 조기경보지표에 비해 경기 침체위험을 더욱 잘 예측하는 것을 보이고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를 GDP 전망 팬차트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
 - 먼저 경기침체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프로빗 모형을 추정하고 동 모형으로부터 경기침체 확률을 추출
 - 이를 이용하여 GDP전망의 예측오차와 경기침체 확률간 관계를 추정하고 추정치를 바탕으로 GDP 전망 예측오차 분포의 왜도 (skewness)를 산출
-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G7국가의 금융위기 직전 시점의 GDP 전망 팬차트를 작성하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
 - 금융위기 예측에 있어 대다수의 국가에서 새로운 팬차트가 기존 방법보다 크게 우월하였음
 - 2008년 6월 기준 GDP 전망 팬차트의 경우 모든 G7국가에서, 2007년 12월 기준 GDP 전망 팬차트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새로운 팬차트가 우수
-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GDP 전망 팬차트의 확장 및 활용방안을 논의
 - OECD 국가로의 확장, OECD Economic Outlook내 수록, 회원국 데스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팬차트 보정 등

< 평가 및 토론 >

- 회원국들은 위기 예측모형으로써 프로빗 모형의 추정결과를 GDP 전망 팬차트로 연결함으로써 보고서가 경기에측 및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 - 특히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경기의 비대칭성을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(BIS)
- 프로빗 모형을 통한 위기의 예측이 팬차트 개선의 핵심 부분인 만큼 프로빗 모형의 엄밀성과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에 대다수 회원국이 공감
 - 금융변수에 의한 금융순환과 경기순환과의 구분이나 심각한 경기 침체와 일상적인 경기침체의 구분 등 경기순환의 정의에 대한 엄밀성이 요구(BIS)
 - 분석은 1980년 이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유용성이 다른지 확인해볼 필요(BIS)
 - 설명변수로 사용된 실업률 갭 등은 실시간으로 관측되기 어려우며 측정오차 문제에 노출되는 만큼 다른 변수로의 교체를 고려할 필요(아일랜드)
- 심각한 경기하방 확률이 존재할 경우 왜도뿐 아니라 평균 전망치의 조정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(한국, 벨기에)
 - 경기하방확률의 예측오차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평균확률의 조정 필요성을 암시(한국)
- 한편 팬차트 활용도 제고를 위해 G7 이후의 국가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장하는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(한국, 일본)

< 주요내용 >

- Gig 경제 플랫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생산성 및 고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
 - Gig 경제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직무(gig)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
 - Gig 경제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참가자들 간 직접 연결을 촉진하고 후기를 통한 평판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간 신뢰를 형성하는 등 혁신적인 사업모델의 하나임
- Gig 경제 플랫폼은 서비스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총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대체관계에 있는 임시노동자 고용은 낮추는 효과가 있음
 -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간 연결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총생산성은 상승
 - 다만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의 유입으로 평균 임금과 총생산성을 낮추는 부정적 효과도 존재
-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면서 Gig 경제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필요
 - Gig 경제 플랫폼의 경쟁을 촉진하고 과도한 시장점유를 제한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의무화 등 새로운 정책도구가 필요
 - Gig 경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적절한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도 고려

< 평가 및 토론 >

- Gig 경제 플랫폼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때에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연구로 평가
- 보고서는 미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각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석 범위를 다양한 국가로 확장할 필요(독일, 인도)
 - 플랫폼의 도입 단계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어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는 단계별 정책 제언 등이 필요(한국)
 - 유럽 등 국경을 넘는 형태의 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노동자의 대체효과 등 부정적 효과도 더 클 수 있음(네덜란드)
 - 보고서는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미시적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거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(벨기에)
- Gig 경제 플랫폼의 도입은 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치상황을 고려한 분석도 필요(미국)
 - Gig 경제 플랫폼의 도입으로 기존의 시장참여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기존 참여자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(한국)
- Gig 경제 플랫폼이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어느 정도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요구됨(스페인, 프랑스, 아일랜드 등)
 - 예를 들어, 샌드박스의 운영 등으로 신생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플랫폼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(호주)
- Gig 경제 플랫폼에 대해서 기존과 다른 조세제도를 적용하는 등 적절한 조세정책에 대한 분석도 필요(프랑스, 폴란드, 덴마크 등)

< 주요내용 >

- 기존 인적자본 추계방식 하에서는 **인적자본과 생산성간의 실증적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아** 인적자본이 OECD 국가의 다요소 생산성(MFP)을 증대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
 - 이는 **교육의 수익률을 선형으로 가정하고 평균 수학기간(Mean Years of Schooling)을 이용하여 추정**한 인적자본이 실제 인적자본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음
- **기존의 인적자본 추계시 사용하던 가정이 실제 자료와 부합하지 않음**을 확인
 - 교육의 수익률은 국가 및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교육 정도에 따라 수익률이 U자 형태를 보이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
- **국가별·시간별 수익률 변화를 고려하여 인적자본을 재추계한 결과 새로운 인적자본이 OECD 국가의 생산성을 잘 설명함**
 - OECD 국가의 경우 **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이 시장수익률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신흥국을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 사회적 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상회**
- 인적자본 추계시 **교육의 질을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OECD 국가의 구조개혁 분석을 위한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음**
 - 새로이 추정된 인적자본 추정치는 **OECD SPIDER**에 수록 예정

< 평가 및 토론 >

- 회원국들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새로운 인적자본이 OECD 국가의 인적자본의 계량화를 개선하는 데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
 - 보고서의 **세부적인 설명**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**향후 분석 방향**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
- 교육의 수익률이 교육기간에 따라 **U자 형태로 변화**하였는데 그 **강건성이나 원인**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이 요구됨(영국, 일본, 이탈리아)
 - 교육의 수익률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데 **U자 형태의 수익률이 나타난 것이 사용한 자료 및 측정방법에 기인한 것**인지 확인할 필요(미국)
- 새로운 인적자본이 기존의 인적자본과 크게 다르게 나타난 국가들이 있는 만큼 **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**(아일랜드, 네덜란드)
 - 각 국가가 인적자본 차이의 발생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의 추정 과정별로 **구체적 분해결과를 제공**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기대(한국)
- 인적자본의 수익률이 변화한 것은 **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의 대체**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**기술편향적 기술진보**가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데 추후 분석시 확인이 필요(한국)
 - **대학 졸업자의 비중 증대와 임금격차의 확대** 등을 함께 보는 것이 좋겠음(TUAC)
- OECD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**요구에 공감하며 자료 제공 노력을 지속**하겠으나 원자료의 제약 등 **어려움이 있다**는 점도 언급

< 주요내용 >

- 대기오염이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경제변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론적·실증적으로 분석
 - 이론적으로 대기오염은 1인당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인구감소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
 - 실증분석 결과, 대기오염(미세먼지농도)의 10% 증가는 같은 해 GDP의 1%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
- 보고서의 분석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판단하더라도 보다 강력한 대기오염 관련 규제가 필요함을 시사
 - 유럽지역에서 미세먼지를 25% 축소하는 데에 약 12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하는데(EC 추정치),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적용하면 오염감소로 인한 GDP 증가분은 그 비용의 최소 두 배 이상임
- 따라서 녹색성장을 Going for Growth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 - EC Ambient Air Quality Directives가 제시한 2010-2020년 중 대기질 목표수준을 달성시, 유럽지역 GDP는 평균 1.25% (0.8~3%) 더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
 - 동유럽국가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대기오염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기오염 규제는 동유럽과 서유럽간 경제격차 수렴 (Convergence)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

< 평가 및 토론 >

- 회원국들은 환경개선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다는 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
 - 기존의 보고서들이 미시적인 분석이나 비경제적 비용을 주로 강조하였던 것에 비추어 기여가 큼(EC)
- 다만 보고서의 추정치 해석에 유의할 필요
 - 설명변수로 미세먼지농도를 사용하였는데 여타 오염도 관련 지표들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정책변수 및 정책의 효과가 상이할 가능성(EC, 벨기에, 미국)
 - 보고서에서 제시된 시뮬레이션은 경제성장과 대기오염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 효과가 과대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(한국, EC)
 - 국가간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음 (한국, 프랑스, 캐나다)
- 대기오염의 비용을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도 요구
 -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 관련 논의도 필요(폴란드)
 - 대기오염이 노동생산성과 인구 뿐 아니라 소비패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다양한 경로에 대한 분석을 요구(폴란드)
 - 대기오염은 쉽게 전이되며 국가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기오염의 지역간 전이효과와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(한국)

 특이사항 없음

※ 선물수령 관련

- 선물수령 여부 : 예. 아니오.
- 선물신고 여부 : 예. 아니오.

10만원(미화 100달러)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